

행정학개론

해설 : 남부박문자 고시학원 이명훈 교수

<<총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학은 ‘하이패스 행정학’ 강의에서 늘 강조해 온 부분들을 중심으로 출제되어 ‘하이패스 행정학’ 과 함께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출제된 지문들이 과거 기출 지문의 반복적 출제보다는 새로운 지문들로 출제되고 있어 이해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에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난이도 높은 문제로는 문제 17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의 특징과 문제 19번 전문경력관제도 등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의 특징과 전문경력관제도는 ‘하이패스 행정학 심화 강의’ 에서 다룬 주제들로 요약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은 점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난이도 중(中)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이해 중심으로 행정학을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당부드릴 것은 지금부터는 국가직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다음 시험을 위해 마음을 다잡으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여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문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답) ①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업무방법을 강조하는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베버(Weber)의 관료제론, 원리주의를 비판하고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보편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체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체제이론의 관점에서 상황적 조건을 유형화하여 중범위이론을 구축하였다(하이패스 행정학 p433).

<<핵심체크>>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

의의	-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상황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설계에 관한 다양한 원칙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이론 - 상황변수에 적합하게 조직구조를 설계해야 효과성이 제고된다고 보고 적합성 가설
학자	로렌스와 로쉬(Lawrence & Lorsch), 번스와 스토크(Burns & Stalker), 민츠버그(Mintzberg), 우드워드(Woodward), 페로우(Perrow), 톰슨(Thompson) 등
특징	- 보편적 원리 부존재 :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원리주의 비판 - 상황에 따른 조직관리 : 기존의 X이론이나 Y이론 등의 극단론 비판 - 중범위이론 : 상황적 조건을 유형화하여 제한된 수준에서 규칙성 발견 - 실증적·과학적 분석 :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이론 구성 - 환경결정론(수동적 적응론) :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이 아닌 수동적 적응론 - 분석단위 - 개인·부서·조직 등, 분석수준 - 개별조직

- 문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②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③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④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조직 내부에 경영관리기법의 도입 및 정부기능의 시장이전을 강조하는 행정개혁의 흐름으로 정치적 논리를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우선시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104).

<<핵심체크>> 신공공관리론(NPM)

개념	• 최협의 : 신관리주의(민간의 경영관리기법을 행정에 도입) • 일반적 의미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신자유주의 : 정부기능의 시장으로 이전) • 광의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 + 참여주의·공동체주의(자원봉사자의 활용)		
배경	• 현실적 배경 : 정부실패(재정난과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		
가치	• 효율성(3Es ;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과 고객에의 대응성 증진		
내용	작은 정부 구축	의의	시장주의(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에 기반을 두고 민간부문 상호 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확대,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공급중심(기업중심) 경제정책, 정부 내 경쟁 원리의 도입, 규제완화 등을 강조
		내용	• 정부와 민간 간의 기능재조정 : 시장성테스트를 통한 민영화, 민간위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재조정 : 보충성의 원칙 활용 • 정부의 역할변화 : 노조기(정책집행)에서 방향잡기(정책결정)로 • 규제완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축
	성과체제 구축	의의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관료해방론에 기반을 두고 기업이 정산, 성과관리, 권한위양, 품질관리기법, 인센티브 메커니즘, 마케팅 기법 등을 강조
		내용	• 내부시장화 : 공공조직을 산출물 단위로 분화하여 경쟁 촉진 • 관리자에게 권한 부여 • 규칙·법규 중심의 사전적 통제를 완화하고 성과에 의한 사후적 통제 강화
	고객주의 확립	의의	고객주의에 기반을 두고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선택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
		내용	•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및 서비스의 질 관리 • 고객지향적 관리기법의 도입 : 고객현장, TQM, PAPR 등 • 전자정부 구축 : One-Stop, Non-Stop 서비스 확립
한계	이념 측면	공익·사회적 형평성·민주성·합법성과 충돌	
	작은 정부 측면	① 기능분담의 적정성 확보 곤란(정책과 집행 구분 곤란), ② 분절화 현상으로 거래(조정)비용 증가 및 책임성 저하, ③ 역대리인 문제 야기, ④ 공동화 국가 초래 등	
	성과체제 구축 측면	① 관료의 책임성 및 도덕적 해이 야기, ② 성과측정 곤란 ③ 공무원의 성과지표에 대한 집착으로 창의적 사고 억제 및 목표의 전환 야기, ③ X이론적 관리 및 공무원의 사기 저하, ④ 잘못 정의된 문제의 문제 야기 등	
	고객중심 행정 측면	① 시민의 수동적 존재화, ② 고객개념의 모호성, ③ 정책의 비밀관성, ④ 서비스의 왜곡가능성 등	

문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답) ②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모형은 온도조절기와 같이 일정한 조건이 설정되면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원리를 정책결정 현상에 응용한 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는 합리모형과 달리 SOP(표준운영절차) 등을 통한 적응적이고 습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하이패스 행정학 p338).

<<핵심체크>>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

의의	일정한 조건이 설정되면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원리를 정책결정 현상에 응용한 모형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류 메커니즘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자동적 의사결정모형
내용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환류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 나가는 적응적·습관적 의사결정 • 표준운영절차(SOP)를 중시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 환류체널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벗어났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여 SOP를 적용함으로써 불확실성 통제 • 반복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의 수정이 환류되는 시행착오적 학습 중시

<<핵심체크>> 분석적 패러다임과 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의 비교

구 분	분석적 패러다임(합리모형)	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
관련 모형	합리모형	적응모형
인간관	완전한 합리성(전지전능한 인간)	제한된 합리성(인지능력상의 한계를 지닌 인간)
의사결정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의 선택	비목적적·적응적 선택
접근방식	연역적 접근	귀납적 접근
학습	인과적 학습(알고리즘적 접근)	도구적 학습(휴리스틱적 접근)
대안의 분석	총체적·동시적 분석	순차적 분석
해 답	최적화(최선의 답 추구)	만족화(그럴듯한 답 추구)

문 4. 근무성적평정상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답) ④

근무성적평정상상의 오류 중 평정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총계적 오류(total error)라 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635).

<<핵심체크>> 근무성적평정상상의 오류

연쇄효과(halo-effect, 후광효과)	의의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
	극복방안	① 체크리스트법, ② 강제 선택법, ③ 평정요소별 평정, ④ 유사한 평정요소는 가급적 멀리 배치, ⑤ 평정요소마다 용지를 달리함
집중화·관대화·엄격화 경향	의의	• 집중화(중간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중간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 • 엄격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낮은 쪽에 집중되는 경향 • 관대화 : 평정결과와 점수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
	극복방안	강제배분법
규칙적 오류·총계적 오류	의의	• 규칙적 오류(일관된 오류) : 특정 평정자의 평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후하거나 나쁜 점수를 주는 것 • 총계적 오류(불규칙적 오류) :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
	극복방안	규칙적 오류는 후하거나 박한 정도를 계산하여 사후 조정이 가능하나, 총계적 오류는 사후 조정 불가능
최초효과·근접효과	의의	• 최초(첫머리)효과 :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현상 • 근접오류(시간적 오류) : 최근의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
	극복방안	① 중요사건기록법의 활용, ② MBO의 활용, ③ 행태기준 평정적도법의 활용
상동적 오차	의의	평정의 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출신학교·출신지역·종교·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선입견에 의한 오류,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
	극복방안	① 개인의 귀속적 요인에 대한 신상정보 비공개, ② 상관 외의 제3자를 평정자로 활용
논리적 오차	한 요소의 평정점수가 논리적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요소의 평정점수를 결정하는 오류	
대비착오	평정대상자를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	
유사착오	평정자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	
투사에 의한 착오	자신의 감정을 타인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데서 오는 착오	
기대성 착오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평가하는 착오	
선택적 지각의 착오	부분적인 정보만 받아들여 평정하는 착오(추측에 의한 착오)	
방어적 지각의 착오	자신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왜곡하여 나타나는 착오	
근본적 귀속의 착오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착오	
이기적 착오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착오(자존적 편견)	

문 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 ③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답) ①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우파로부터는 자유의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좌파로부터는 '완전한 평등'의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149).

<<오답정리>>

- ① 일선관료는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 하에 고객을 재량적으로 범주화하여 선별하고 정형화와 단순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이율배반적이며, 애매하다.
-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업무상황과 인간적으로 대처해야 할 업무상황으로 인해 직무의 자율성이 많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넓다.

<<핵심체크>> 롤스(J. Rawls)의 정의론

의의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고 보는 원칙(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전제	결과보다는 과정의 옳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의무론적 시각	
가정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 도출 : 계약당사자들의 자격 요건 - 원초적 상태	
정의의 원리	제1 원리	•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
	제2 원리	• 차등조정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하여 존재해야 함 ② 차등의 원리 : 차등조정은 저축의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우선 순위	두 원리가 충돌할 때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에 우선
평가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적 시각이나 양쪽 모두의 비판 • 충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로부터의 비판 • 최소극대화(maximin)원리에 의한 의사결정(가정)에 대한 비판	

문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ㄹ.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ㄷ. 보조금(grant)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ㄷ

(답) ③

살라몬(L. M. Salamon)의 직접성에 따른 정책수단의 분류는 행정활동을 정부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제3자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경제적 규제(ㄴ), 정부소비(ㄷ), 공기업(ㄹ)은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며, 조세지출(ㄱ), 사회적 규제(ㄷ)는 직접성의 정도가 중간이며, 보조금(ㄷ)은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정책수단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261).

<<핵심체크>> 정책수단의 직접성에 따른 분류

직접성에 따른 분류	의의	행정활동을 정부가 직접 하는지, 제3자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
	직접성	낮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높음 보험, 직접 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공기업, 정부소비

문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답) ③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에 의하면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적·기술적 자원의 만성적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355).

<<핵심체크>>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의의	• 일선관료 : 업무수행과정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교사, 경찰, 복지요원 등) • 일선관료제 : 구성원의 상당부분이 일선관료로 구성되는 공공서비스 기관
직무특징	• 정형화하기 곤란한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상황 - ① 시민과 직접 접촉(인간적 차원에서 대처), ② 전문지식과 정책대상자들의 정보 독점, ③ 광범위한 직무상 자율성 등
업무환경	• 인적·물적 자원 및 시간적·기술적 자원의 만성적 부족 •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의 존재 • 업무의 경계와 분할의 불분명 • 부서 목표의 애매성과 이율배반성 •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결여
업무방식	• 정형화, 단순화, 관례화 -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고객의 재량적 분류작업을 통한 정형화와 단순화에 의해 문제 해결

문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 ②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③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④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답) ④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이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466).

<<오답정리>>

-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속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②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③ 보좌기관(막료)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핵심체크>> 정부조직의 구성

개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조직			
구성	중앙행정기관	의의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관(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함)	
		유형	단독제	- 부(部) : 소관사무의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 처(處) :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부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막료부처 - 청(廳) : 각 부의 집행기능 중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행정기관
			합의제	- 대통령 소속 : 방송통신위 - 국무총리 소속 : 금융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 독립 위원회 : 국가인권위
	조직내부기관	최고관리층		단독제 중앙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장관·처장·청장 등)
		하부조직		- 보조기관(계선) : 차관·차장·실장·국장·과장 등 - 보좌기관(막료) : 차관보·담당관 등
		소속기관		- 부속기관 : 교육훈련기관, 자문기관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의 일선기관

문 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답)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663).

<<오답정리>>

-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핵심체크>> 공무원의 징계

징계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의하고 인사기록에 남음(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1/3을 감함(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전문경력관과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하지 아니함)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급에 영향이 없음(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8 ~ 1/4를 감함)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 1/2를 감함(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를 감함)
징계기구	중앙징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위원장 : 인사혁신처장) - 심의·의결 대상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보통징계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치 - 심의·의결 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징계시효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문 10. 정부회계의 가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답)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하이패스 행정학 p788).

<<핵심체크>>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구분	단식부기	복식부기
개념	현금수지에 대해 각각의 대장에 거래의 일면만을 기록하는 방식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거래의 양면을 기록하는 방식
정확성	오류의 검증 기능이 없어 채무 및 손익 파악이 불완전	이중적 회계작성을 통한 오류의 검증 기능이 있어 채무 및 손익파악이 완전
기록범위	현금수지, 채권·채무만 기록	자산, 부채, 자본 등 모든 재산변화 기록
기록방법	- 상식에 의한 가장 - 경영활동의 일부만을 기록하는 불완전한 부기방식	- 일정한 원리에 의한 가장 - 경영활동의 전부를 기록하는 완전한 부기방식
적용	소규모 기업에서 주로 활용	대규모 기업에서 주로 활용
장점	- 단순하고 작성 및 관리 용이 - 관리비용 저렴	-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므로 총량 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 증진 - 사업의 원가 파악이 용이하여 기업식 예산제도의 전제가 됨
단점	- 이익과 손실의 원인 파악 곤란 - 자동검증장치의 결여	- 회계처리비용 과다 - 전문적 회계지식 필요

문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답)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추가경정예산의 잦은 편성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편성횟수가 아닌 편성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700).

<<핵심체크>> 추가경정예산

의의	-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의결되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 예산단일성 및 예산한정성 원칙의 예외
편성 사유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특징	- 추경예산은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에 흡수되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됨 -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최근 우리나라는 추경예산의 잦은 편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편성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현황	거의 매년 1~2회 편성

문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 ②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 ③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④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답) ③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이론'에 의하면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하이패스 행정학 p335).

<<핵심체크>>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

의의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인 정책의 창에 이르러 그들의 경로가 서로 교차될 때(주로 점화장치에 의해 교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	
구성 요소	문제의 흐름	정책결정자의 공중문제에 대한 인지
	정책의 흐름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나 해결책
	정치의 흐름	정권교체, 국회의 정당외석분포 변화, 국민의 여론 변화 등
특징	- 정책의 창은 일시적으로 열리며, 열린 창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선택도자들은 다음번 창이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함 - 정책의 창은 극적 사건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어떤 사건이 정책의제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건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들 - 정책의 창은 정책결정보다는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설명이 보다 용이한 분석들	

문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답) ②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연결방법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423).

<<핵심체크>> 조정의 원리

조정 원리	의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정연하게 결합하고 배열하는 원리
	수평적 기제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 방법 - 정보시스템, 직접접촉(연락담당자 지정), 임시사업단(TF), 프로젝트 매니저(통합관리자), 프로젝트 팀, 위원회나 회의, 상위통합기구의 활용 등
	수직적 기제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을 통제·조정하는 방법 - 계층제의 활용 또는 계층직위의 추가, 규칙과 상위계획의 마련, 수직정보시스템(정기보고, 문서화된 정보, 정보통신시스템)의 활용 등

문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답)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2항) - (하이패스 행정학 p786).

<<핵심체크>> 성인지예산제도

의의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제도	
중요성	성별영향평가제도와 함께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우리나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의 핵심적 요소	
도입	외국	호주 정부가 최초로 채택
	우리나라	- 최초로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둠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뿐만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 - 국가(「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지방재정법」)에도 적용
작성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	

문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답) ②

결산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의 의결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하이패스 행정학 p773).

<<핵심체크>> 결산

의의	1회계연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검증하는 행위
효과	-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할 경우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 - 정부의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할 경우 그 지출행위를 무효·취소시키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관계 공무원은 형사·변상책임을 짐
과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② 기재부장관이 국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 ⇒ ③ 감사원이 회계검사 후 기재부장관에게 송부 ⇒ ④ 결산서의 국회 제출(5월 31일까지) ⇒ ⑤ 국회의 결산심의(상임위법 예비심사 ⇒ 예결위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최 전까지 완료해야 함)

문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금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답) ③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ㄱ)은 일탈형 부패의 예이다.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ㄴ)은 백색부패의 예이다.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금행료’를 받는 것(ㄷ)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ㄹ)은 비거래형 부패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205).

<<핵심체크>> 공무원 부패의 유형

부패의 제도화 정도	일탈형 부패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한 부패(개인부패와 연계됨)	
	제도화(구조화·체 제화)된 부패	의의	잘못된 관행이 제도처럼 고착화되어 공무원이나 국민이 부패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패(예 : 인·허가시 급행료 지불, 은행에서 대출시 커미션 지불 등)
		특징	부패가 실질적 행동규범이 되고 공식적 행동규범이 예외로 전락, 조직이 공식적인 행동규범의 위반을 조장·은폐 등
부패의 용인정 도	백색부패	선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예;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위기가 없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	
	흑색부패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부패	
	회색부패	사회구성원 중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예 : 과도한 선물수수에 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할 수는 있지만 「부패방지법」에 규정하는 것에는 반론이 있는 경우)	
거래의 여부	거래형 부패	뇌물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자와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는 자 간에 금전적 거래가 성립되어 발생하는 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	
기타	• 부패의 원인 -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 부패발생수준 - 개인부패, 조직부패(조직적 은폐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음)		

문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답) ③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 (하이패스 행정학 p835)

문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 ① 상징(symbol) ② 강제력(coercion)
③ 전문성(expertness) ④ 준거(reference)

(답) ①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은 권력을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제적 권력으로 구분하였다(하이패스 행정학 p539).

<<핵심체크>> 프렌치(French)와 레이븐(Raven)의 권력유형

구 분	의 의	특 정
준거적 권력	권력수용자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하는 권력(카리스마와 유사)	• 공식적 지위와 일치하지 않음 • 몰입가능성 높음
전문적 권력	권력수용자가 권력행사자에 대하여 특정분야에 대해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지할 때 발생하는 권력	• 공식적 지위와 일치하지 않음 • 몰입가능성 높음
합법적(정통적) 권력	권력수용자가 권력보유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지할 때 발생하는 권력(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한 권력으로 권한과 유사한 개념)	• 공식적인 직위에 기반 • 직위가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커짐 • 복종가능성 높음
보상적 권력	상대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 권력	• 공식적 직위에 기반 • 복종가능성 높음
강압적 권력	복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부정적 결과 내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 권력	• 공식적 직위에 기반 • 저항가능성 높음

문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답) ②

전문경력관은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597).

<<핵심체크>>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의 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직분류	일반직 공무원	
지정요건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
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함	
근무기간	5년 이내	제한 없음
신분보장	근무기간 동안 신분보장	정년까지 신분보장
구분	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
계급, 직군·직렬	있음	없음
정 계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계의 종류로서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문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답)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생산을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생산)하는 유형에 속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172).

<<핵심체크>> 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구 분		공급(provide)	
		정 부	민 간
생 산 (produce)	정 부	• 정부 서비스 • 정부 간 협약	• 정부 판매
	민 간	• 민간과의 계약 • 허가·면허 방식 • 보조금 지급 방식	• 중서지급 방식 • 시장 기구 • 자조 방식 • 자원봉사 방식

① 공급(provide) : 정책결정, 생산자 결정, 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최종 책임을 지는 것

② 생산(produce) : 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달이나 집행을 수행하는 것